

Business Focu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November 2024

—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박도휘 이사
dohwipark@kr.kpmg.com

조진희 이사
jinheecho@kr.kpmg.com

노승환 책임연구원
seunghwanroh@kr.kpmg.com

정미주 책임연구원
mijujung@kr.kpmg.com

류승희 책임연구원
seungheryu@kr.kpmg.com

전혜린 선임연구원
haerinjeon@kr.kpmg.com

이아름 선임연구원
alee65@kr.kpmg.com

이종민 선임연구원
jlee547@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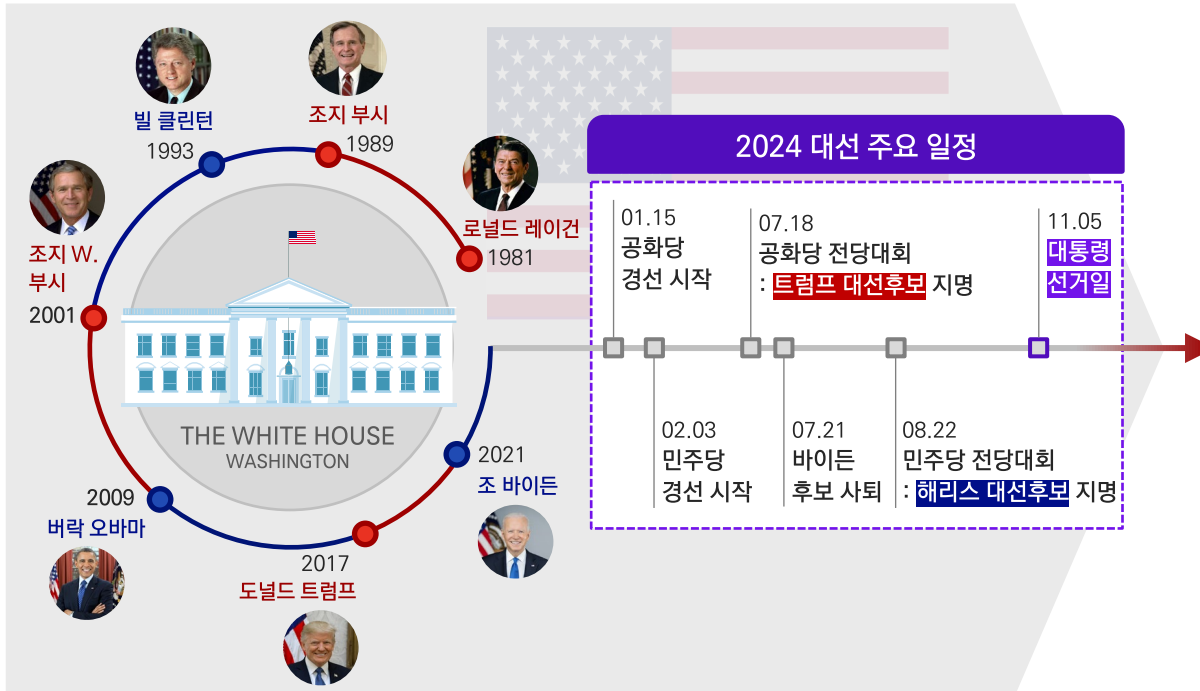
Contents

I.	미국 대선 개요 및 결과	2
II.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외교·안보·경제·통상 정책	5
III.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	17
IV.	결론 및 시사점	27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2024 미국 대선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60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이번 대선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

1980년대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 및 2024 대선 결과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2024 미국 대통령 당선: 도널드 트럼프

나이	78세(1946년생)
출생지·주요 활동지	뉴욕·美동부
인종·성별	백인·남성
종교	개신교
학력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제학 학사
주요 경력	• (전) 트럼프기업 회장 • 45대 미국 대통령

미국 대선 주요 키워드 'T.R.U.M.P'

삼정KPMG는 이번 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부각된 주제를 'T.R.U.M.P'의 키워드로 제시함.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정책 대변혁, 리스크 감수, 예측불가한 방향의 정책 기조로 불확실성 확대, 제조업 강국, 양립하기 어려운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의 주제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T**rade and Tariffs •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무역 정책 대변혁**
- R**isk Take • 무역적자 심화 및 자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금리·약달러를 지향하며 기꺼이 리스크 감수**
- U**npredictability • **예측불가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정책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 M**anufacturing • 미국을 과거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
- P**aradox • 양립하기 어려운 '기업 감세-저금리-저물가-재정지출 확대-관세 인상' 등의 **공약 추진에 귀추가 주목**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ents

I.	미국 대선 개요 및 결과	2
II.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외교·안보·경제·통상 정책	5
III.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	17
IV.	결론 및 시사점	27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

글로벌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자원을 해외에 투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각국과의 관계를 상호 이익에 기반한 거래적 동맹으로 재편하려는 입장을 강조



‘국익’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

• 거래 기반 동맹관계: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

-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를 내세우며,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 중심의 실리 강조
 - ✓ 적대세력 및 비민주주의 국가 협상 가능
 - ✓ 국제분쟁 연루 최소화, 유럽·아시아·중동 등 전략지역의 패권도전국 견제
- 동맹관계 재조정 및 동맹국 방위비 부담금 증액 요구 등 무임승차 불가론 강조
 - ✓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시사

• 한미동맹 재조정, 북미 정상외교를 통한 북한 위협 관리

외교

이스라엘 - 중동

러시아 - 우크라이나

對중국

對한반도

• 강력한 親이스라엘 기조

- 親유대주의 강조, 중동에서의 이란 위협에 대응 및 이스라엘 안보 지원 강화

•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

-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및 재정 지원 반대, 대출 형태로 지원
-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으로 대러 관계 회복

• 적대적 관계 규정 및 강력한 통상 대응

- 중국의 최혜국 대우 박탈 및 고관세 60% 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 확대
- 전면적 디커플링 전략(De-Coupling, 공급망과 무역에서 전면 분리)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對한반도, 한미동맹 재조정·정상외교 통한 北위협 관리

트럼프 당선인은 對한반도 정책 관련하여,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및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재조정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정상외교를 통한 북한 위협 관리 정책을 추진할 전망. 특히 동맹국의 부담을 증가시켜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북한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

한미동맹 재조정·정상외교 통한 北위협 관리

한미동맹과 국방	• 한미동맹 약화: 손익계산에 따른 재조정 - 주한미군 감축·방위비 분담금 증가·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재협상 ✓ 트럼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할 것”(‘시카고 경제클럽’ 대담, 2024.10.15) -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중단 • 한미일 공조보다 양자주의적 접근으로 한미일 협력 정체 • 군사 협력 및 동맹 최소화, 동맹국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 이행 • 북한 핵 위협 대응 위해 한국 및 일본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허용 시사
북한	• 북미 관계 개선, 정상외교 통한 북한 위협 관리 - 북한 비핵화와 미사일 실험 중단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타당한 방식의 대북 직접 대화 및 협상 - 북미 정상외교 시, 통미봉남 가능성 多
경제안보	• 한미 무역관계 재조정과 공세적 통상 및 관세 장벽 추진 - 대미 무역흑자 산업에 대한 통상 장벽 강화 ✓ 자동차·반도체 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수출 제한 등 ✓ 무역적자 감소를 위한 10~20% 보편관세 부과 - 한미 FTA 재재협상 및 전기차·배터리 투자보조금 삭감

“공화당은 동맹국들이 우리의 공동 방위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할 것”
(공화당 정강·정책, 2024.07.15)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 2024.07.18)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 바란다”,
“왜 우리가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대신 방어해야 하느냐”
(2024.04 타임지 인터뷰)

“트럼프에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
(조지아주 서배나 유세, 2024.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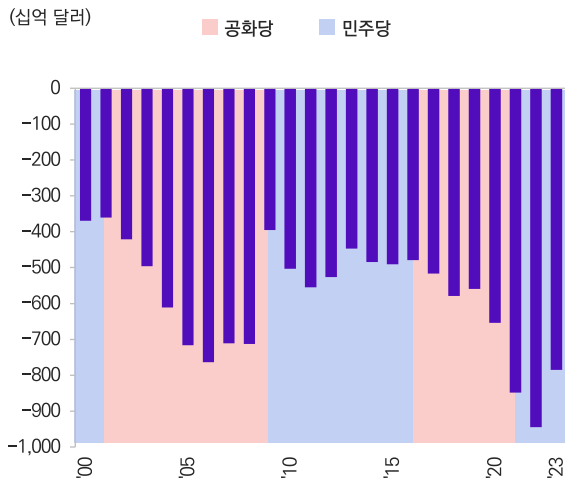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미국을 둘러싼 경제·통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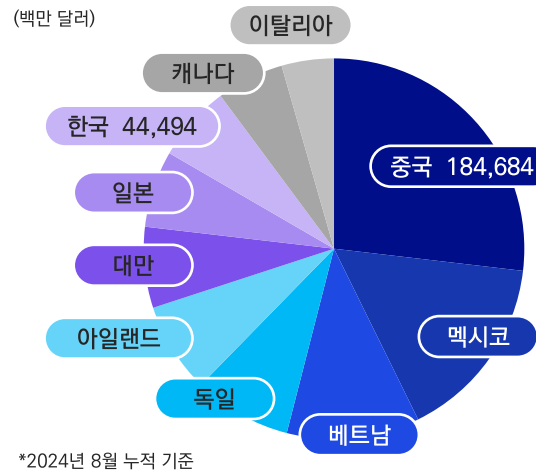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 대비 더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전망이다.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는 물론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력 강화 가능. 미국의 통상 정책과 외환시장 동향의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

미국의 무역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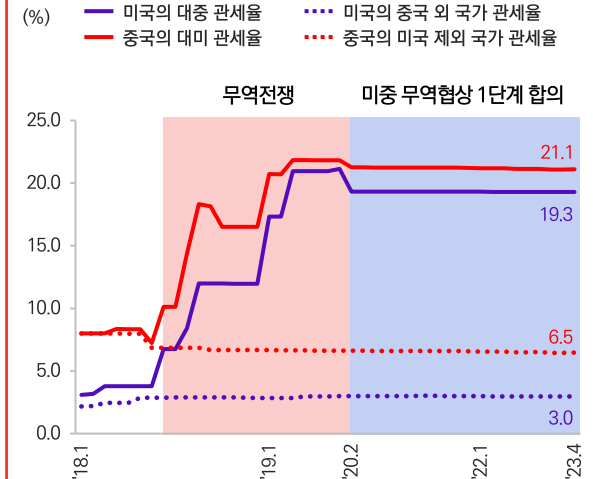
-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로 '22년 9,448억 달러 기록 후 '23년 소폭 감소

미국의 10대 적자국



- 미국의 적자국은 '24년 8월 기준 중국(1,847억 달러), 멕시코(1,090억 달러), 베트남(776억 달러) 순이며 한국(445억 달러)은 8위에 위치

미중 무역전쟁과 관세율 변화 추이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 고율의 관세 부과 기초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지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양상
- 미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대중 견제를 지속할 예정이며, 한국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 있음

Source: US BEA, US DOC, PII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중심 의회는 상호무역법 제정과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를 통해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일자리 보호를 추진할 가능성 높음.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미국과 중국 간 고율의 보복 관세 전쟁으로 격화 시 전 세계 GDP 및 무역량 감소로 이어져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는 일정 수준의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

상호무역법 제정과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

-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을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동등한 보복관세로 무역적자 해소
 -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과 미국 연방정부의 거래 금지로 일자리 보호
-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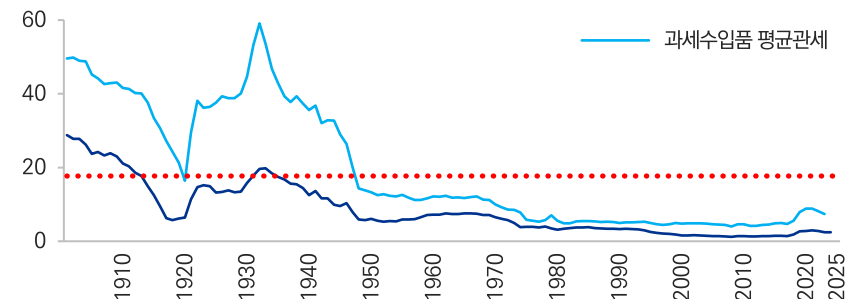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의 무역협정 관련 행보와 향후 전망]

구분	내용
2017년 1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2019년 1월	• 한미 FTA 개정
2020년 1월	• 미일 무역협정 발효
2020년 7월	• NAFTA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으로 대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향후 전망	• IPEF 무역협정 폐기 • USMCA 무역협정 재협상 • 한미 FTA 개정 추진

보편관세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도입으로 미국 노동자·생산자 보호와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 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23년 기준 3조 달러 이상 규모)에 10~20%의 보편관세 추가 부과
 - 모든 중국 상품에 60%의 관세 부과 의지 표명 및 중국산 필수품 수입 단계적 중지 제안
 - 유럽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미국의 관세 변화 흐름과 트럼프의 제안]



Source: 트럼프 후보 공약집 Agenda 47, KPMG "U.S. trade policy under presidential candidates Kamala Harris and Donald Trump" (September 2024), Tax Foundation,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당시 부과된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바이든 정부에서 관세할당제도를 통해 제한된 물량에 한해 한시적 무관세 조치 시행. EU-미국 간 철강협정 타결이 '24년 불발됨에 따라 동 조치는 2025년 초까지 상호 연장 합의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견제 강화와 공급망 재편

트럼프 당선인은 디커플링 신념하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해 대중 관세 인상 추진을 발표. 또한, 소액물품 면세 제도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국산 저가 상품 공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에 따라 원산지별로 면세 기준을 강화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우회수출에 대한 감시 강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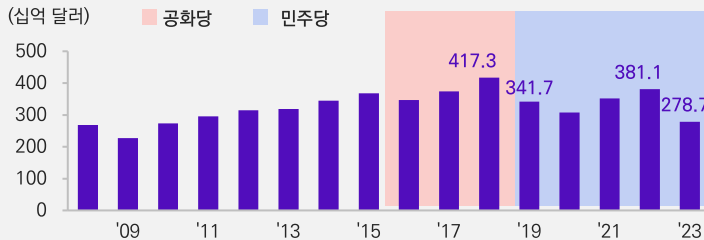
디커플링과 중국의 최혜국 대우 박탈

- 중국을 공급망에서 아예 분리하는 디커플링
 -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해야 한다는 신념 표명
 -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와 필수품 수입의 단계적 폐지 등을 제안
- 중국 최혜국 대우 박탈
 - 중국의 최혜국(MFN*) 지위 취소를 주장, 이 경우 미국은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중국 제품에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
 - 단, 이는 의회 지지에 따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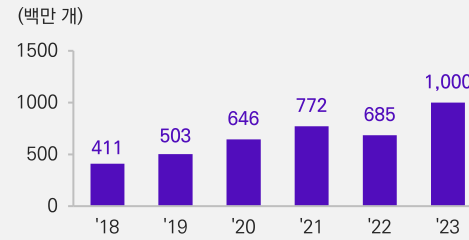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수입품 면세 배제 추진 가능

- 소액 수입물품 면세 제도 남용에 대한 공화당의 해법
 - 소액물품 면세 제도(De Minimis)는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일정 가치 이하 수입품의 경우 무관세 적용(1936년 도입)
 - 미국이 '16년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면세기준을 기존 1인당 하루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뒤 중국산 저가 상품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규모 증가
 - 트럼프 1기 무역정책의 설계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쉬인·테우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의 소액면제한도 기준 배제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면세 특혜 변경에 강력한 변화를 꾀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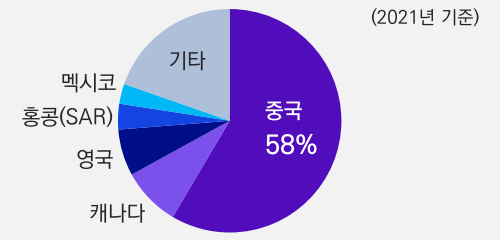
[미국, 대중 무역적자 추이 (상품)]



[소액면세특혜로 미국에 유입되는 연간 상품 수]



[소액면세특혜로 미국에 들어오는 상품의 원산지 비중]



Source: KPMG "U.S. trade policy under presidential candidates Kamala Harris and Donald Trump" (September 2024), 트럼프 후보 공약집 Agenda 47, US BEA, Tax Foundation

Note: MFN(Most Favored Nation)이란 한 나라가 타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지위를 뜻함

[참고] USMCA·한미 FTA 등 무역협정 재협상 전망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무관세협정(USMCA)을 체결한 이후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 수출 통로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미 USMCA 재협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미국의 주요 적자국인 한국과 체결한 한·미FTA 또한 재협상의 타깃이 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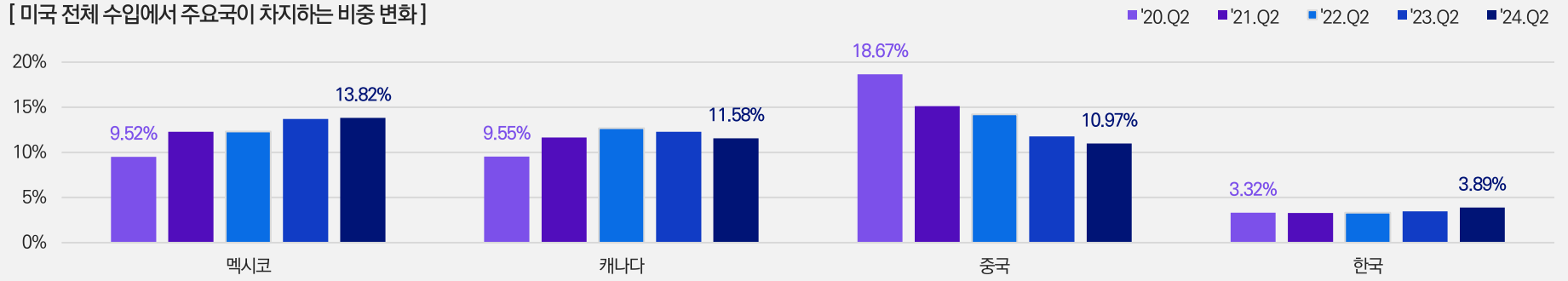
중국의 '우회 수출통로' 비판 받는 USMCA 재협상 전망

- USMCA 체결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은 크게 증가
 -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년 2분기 9.52%에서 '24년 2분기 13.82%로 증가,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동기간 18.67%에서 10.97%로 감소
- 미국은 2026년 USMCA 개정을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 중
 - USMCA는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정하고 6년마다 협정 내용을 재검토해 협정 갱신여부를 결정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한 차례 개정한 이력
 - 당시 '21년 종료 예정이던 한국산 화물자동차의 관세를 '40년까지 유지하기로 기한 연장
- 트럼프 당선자,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자동차 지목
 - 트럼프 캠프는 유세 과정에서 바이든의 전기차정책 폐기 공약을 내세우며 “바이든 정부의 1조 달러 가까운 적자의 주요 원인은 유럽,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에서 온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라 언급

[미국 전체 수입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Source: 미 상무부, 언론보도 종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ESG 정책과 친환경 규제 완화

트럼프 당선인은 ESG 측면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 입장을 보여 왔으며,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방점. 이에 따라 IRA 배터리 분야 지원 정책을 축소할 가능성 존재

전임 정부와 정반대 ESG 정책 예상

- **E** 친환경·에너지 규제 완화를 통해 제조업을 위한 저가 에너지 생산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철회
 -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에 대한 규제 완화로 미국 에너지 자립도 증진 및 가격 인하 효과 기대
 - 파리 기후 협정 재탈퇴 가능성, 그린뉴딜 정책 폐지, 탄소 배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 확보 및 생산비용 절감으로 미국 제조업 활성화 기대
- **S** 사회적 형평성 강화보다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
 - 다양성, 노동권, 소득 불평등 개선 등 사회적 형평성 강화보다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
- **G**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에 소극적
 - 관련 규정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

에너지 규제 완화와 화석연료·원전 생산 확대

- 화석연료, 원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 기후변화 회의론 관점으로,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비용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어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고 내연차 보호
 - 그린 뉴딜¹ 즉시 폐지, 에너지 인프라 신·증설 투자 관련 환경규제 완화 전망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배터리 분야 지원 정책의 축소 가능성
 -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배터리 지원 축소 혹은 폐지 가능성
 - CAFE²,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등 최소 수준으로 완화 혹은 폐지 예상
 - 부통령 밴스는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폐지안이 담긴 'Drive American Act' 법안 발의('23년 9월)
 - 전기차 시장 전반 위축 및 내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비중 상승 예상

Source: 언론보도 종합

Source: 산업연구원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2024.10.07), 언론보도 종합

Note 1: 그린 뉴딜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성장산업화 목표

Note 2: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는 기업 평균 연비 규제로 전기차 전환 촉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적자 확대

2017년 트럼프 1기의 TCJA(Tax Cut and Jobs Act, 법인세 최고세율 35%→21% 인하 등이 담김)가 2025년 만료되는 가운데, 트럼프는 법인세 추가 인하에 나서겠다는 방침. 법인세 최고세율 목표치를 15%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관세를 높여 충당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규모는 최대 15.55조 달러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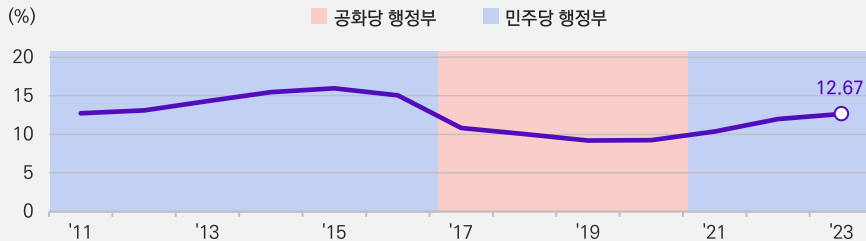
법인세 최고세율 15%까지 인하 계획

- 대통령 시절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트럼프는 추가 인하 시사
 - 공화당 행정부 시절 감세를 골자로 한 TCJA(Tax Cut and Jobs Act of 2017)가 '25년 만료될 예정으로 동 법안의 연장 계획
 - 트럼프는 기업의 이익 증대와 재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목표치를 15%로 설정하겠다고 밝힘
 - 법인세 인하와 함께 자본 투자와 연구비의 즉시상각*, 이자공제한도 완화 등의 법인세 관련 조항도 되돌릴 가능성
 -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관세를 높여 충당한다는 방침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 최대 15.55조 달러 증가 가능성

-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정 적자는 중앙값 기준 향후 10년간 7조 7,500억 달러 증가 전망
 - 적자 증가 요인이 10조 4,000억 달러, 감소 요인이 3조 7,000억 달러이고, 총이자 비용 1조 500억 달러를 반영한 수치
 - 비용을 높게 책정한 고비용 시나리오에서는 장기 누적 재정 적자 추가분이 15조 5,500억 달러로, 저비용 시나리오에서는 1조 6,500억 달러로 추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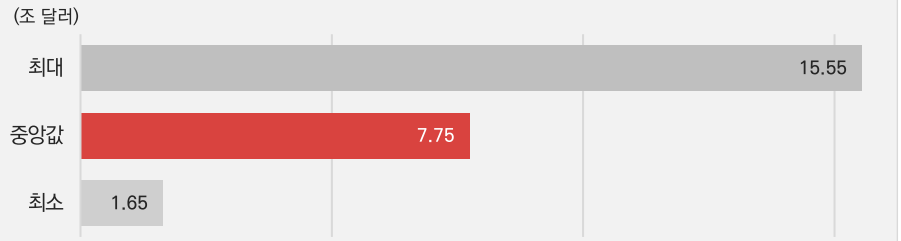
[미국 실효 법인세율 추이]



Source: US BEA

Note: 비용을 공제받는 시기를 앞당겨 기업이 초기에 부담하는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

[시나리오별 재정 적자 전망 (2026-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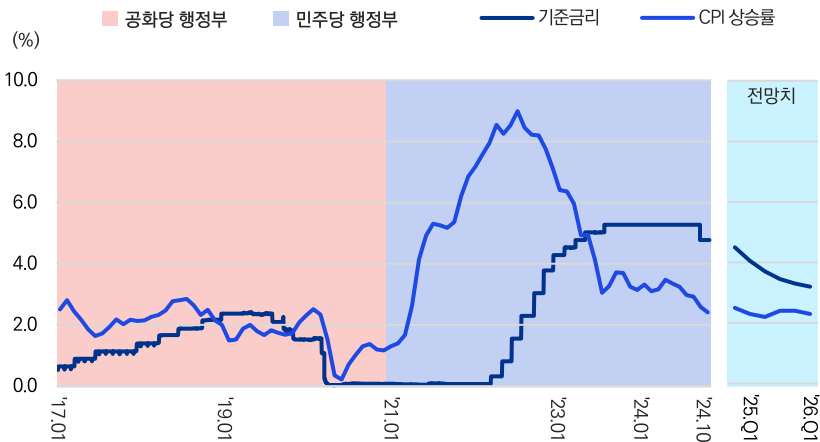


Source: CRFB

트럼프 2기 행정부, 저금리·약달러 지향

2024년 9월 연준은 빅컷을 필두로 긴축적 통화정책을 마무리하며 인플레이션 수준과 고용상황을 고려하며 금리 인하를 조정할 전망.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자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약달러’ 정책 추진을 강력 시사. 트럼프 1기와 유사하게 환율·무역정책을 병행할 수 있으며, 달러화 가치의 변동성 확대 가능

미국 정책금리와 인플레이션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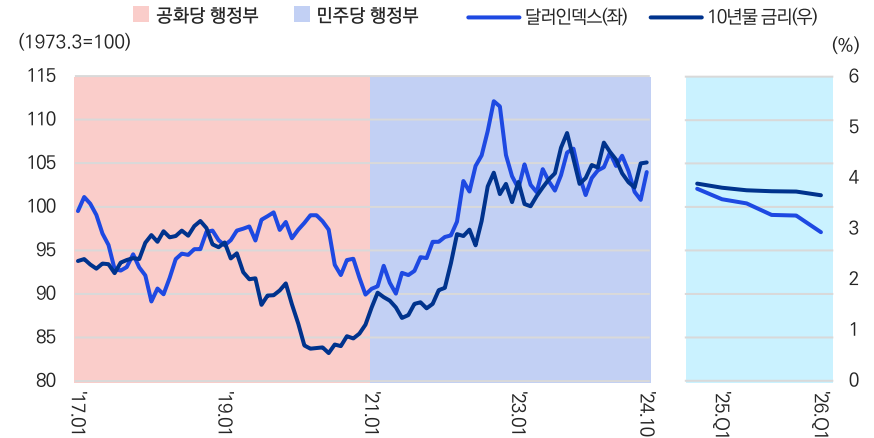


- '24년 9월 19일 연준은 4년 반 만에 빅컷(기준금리 0.5% 인하)을 단행하며 긴축적 통화정책을 마무리하는 양상
- 미국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할 전망이나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 이어질 전망
- 글로벌 IB는 '26년 1분기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를 각각 2.3%, 3.2%로 전망

Source: St. Louis FED, Bloomberg(2024.11.04 기준)

Note: 미국 기준금리 전망치의 경우, 상한 기준으로 블룸버그 가중 평균 수치이며, CPI 상승률은 블룸버그 가중 평균 기준

달러인덱스 및 미국 장기금리 추이 및 전망



- 트럼프 1기,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대중 관세 부과, 중국 등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19년 8월), 베트남 타이어 수입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등 환율과 무역 정책을 연계
- 트럼프 당선인은 약달러 정책을 적극 시한한 바, ① 외평 기금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 ②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연준 압박, ③ 외국의 미국 자산 매입에 대한 특별과세, ④ 일본·중국 등 통화가치 인상 압박 등의 정책이 병행될 소지

Source: St. Louis FED, Bloomberg(2024.11.04 기준), KOTRA 경제통상 리포트(202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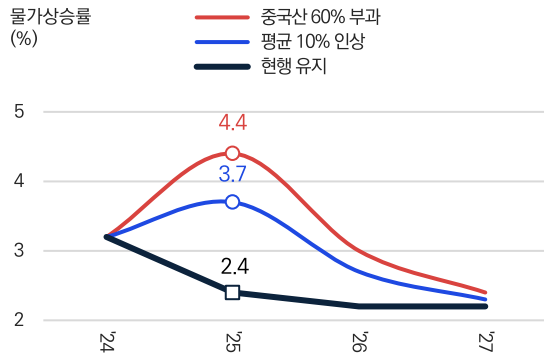
Note: 미국 기준금리 전망치의 경우, 상한 기준으로 블룸버그 가중 평균 수치이며, CPI 상승률은 블룸버그 가중 평균 기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간 상충, 시장 혼란 가능성 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법인세·개인소득세 감세, 반이민정책은 ‘트럼프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저금리·약달러 정책 기조와 상충할 소지.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연준 파월 의장의 임기(2026년 5월)를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미국 연준의 독립성 축소를 시사하는 등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여 시장 변동성이 가중될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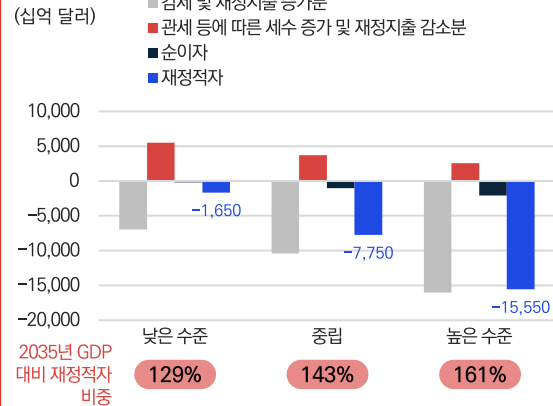
트럼프 정부 정책의 금리 상승 압력 요인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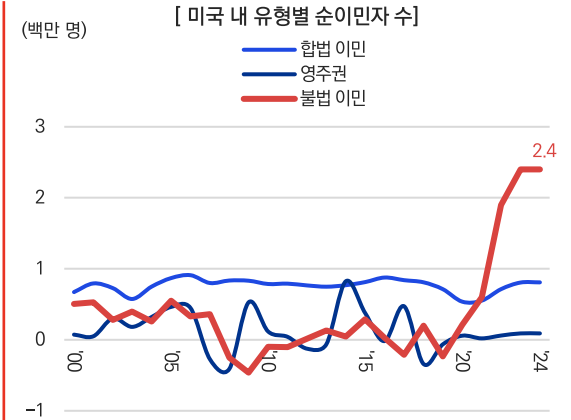
- 미국 의회에산국은 관세 부과가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
 - '25년 물가상승률은 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 시 4.4%, ② 보편적 관세 평균 10% 인상 시 3.7%에 달할 전망
- 이는 연준의 물가안정 목표를 상회하여 기준금리를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감세 등에 따른 재정적자 규모 확대 ('26~'35)



-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및 재정지출 증가분(최소 6.9조 달러 ~16.0조 달러)은 재정적자 규모 확대의 주요 요인
-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채권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국채 공급이 늘어나 금리 인상을 야기할 소지

이민 통제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소비자물가의 안정세와 고용 증가가 지속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미국 내 '이민자' 효과에 주목
- 트럼프 정부는 이민 억제 및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정책 예고
- 이는 10년간 1조 달러의 재정 소요 및 노동 인력 축소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

Source: 미국 의회에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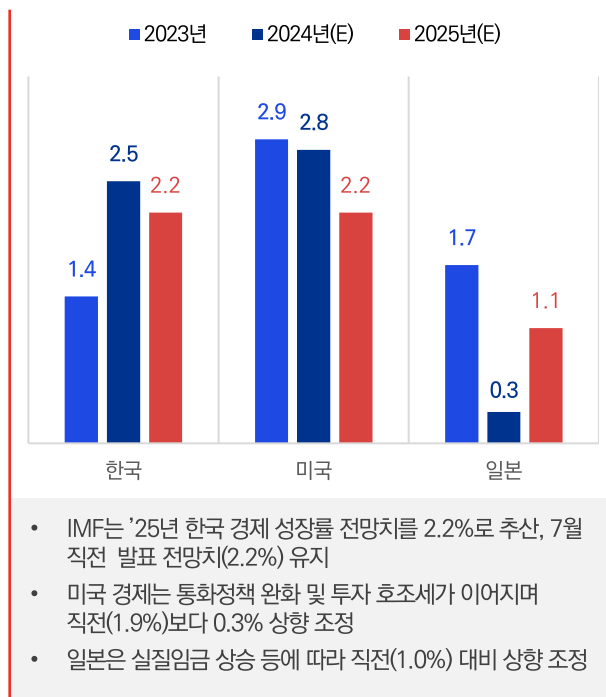
Source: CRFB "The Fiscal Impact of the Harris and Trump Campaign Plans" (October 2024)

Source: CBO, Brookings "New immigration estimates help make sense of the pace of employment" (March 2024)

[참고] 한미일 금융시장 추이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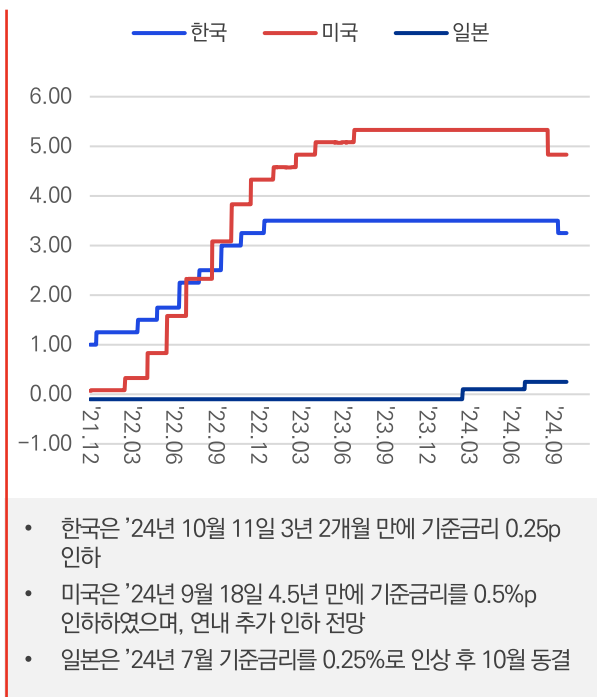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와 관세 인상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과 안전자산 선호 등은 달러화 강세를 유발할 수 있음. 트럼프 정부는 약달러 정책을 위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거나 일본 등에 대해 통화가치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노출 가능

한미일 성장률 전망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
Note: IMF는 1, 4, 7, 10월 매년 네 차례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

한미일 기준금리



Source: 한국은행, St. Louis FED, 일본은행(BOJ)

원달러, 엔달러 환율



Source: LSEG

Contents

I.	미국 대선 개요 및 결과	2
II.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외교·안보·경제·통상 정책	5
III.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	17
IV.	결론 및 시사점	27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내 영향 Overview



반도체

- 보호무역주의 및 대중 규제 강화, 반도체 지원법 관련 불확실성 확대 우려
- 한국 기업은 미국의 강력한 대중 견제책에 따른 일부 반사이익 기대



자동차·이차전지

- 미국향 완성차 수출 시 관세 인상 및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축소
- IRA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축소 또는 일부 내용 무력화



에너지

- 화석연료, 원전 등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와 유가의 하향 안정화
-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의 미국 내 발전 프로젝트 위축 및 수출 타격



조선

-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에너지 사용 강조
- 미국을 중심으로 LNG·LPG의 수요 및 수출 증가 기대



건설

- 신속한 러-우 전쟁 종식을 언급함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혜 기대
- 중동 강경책 예고는 중동시장 의존도가 확대되는 한국 건설업계에 악재



농식품

- 환경정책 완화 기조로 세계 곡물가 하락 기대
- 보편관세 도입으로 한국 식품 기업의 관세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방위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 방산협력 리스크 예상
- 미국의 중동 국가 수출 통제 완화로 중동 지역을 둘러싼 수출 경쟁 심화



AI

-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에 대한 철폐 및 지원 확대 전망
- 미국 중심 산업 성장 위해 미국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가능성 존재



반도체 》 첨단 반도체 패권 확보 위한 보호무역주의 및 대중국 규제 강화

반도체 보호무역주의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에 대한 더욱 직접적이고 확대된 범위의 규제를 내세우며 첨단 반도체 기술 패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반도체 지원법 일부 수정 또는 축소 가능성이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



반도체 보호무역주의 및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고,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축소 우려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

- 반도체 보호무역주의 및 대중국 규제 강도 및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 관세 부과를 언급하고 있어 반도체 관련 더욱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를 보일 전망
 - 특히 AI 반도체 등 고성능 반도체 관련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미국 중심 정책 구현 및 중국 견제 움직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최근 대중국 반도체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이어, 반도체 전후방 산업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지원법 조항 일부 수정 또는 직간접적인 지원 규모 축소 전망이 제기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분류	규제 내용
대중국 수입 규제	•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언급('24.02)
대중국 수출 규제 품목 확대	• 반도체 장비 외 관련 서비스, 부품에 대한 대중국 규제 확대('24.03)
저사양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	• 저사양 AI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확대('23.12)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	• 첨단 반도체 장비 대중국 판매 제한('22.10), AI, 슈퍼컴퓨터용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한('22.12)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
 -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축소 또는 변경,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 확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 한국은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하는 3대 국가 중 하나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전후방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특히 고성능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 위치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2023년 미국 반도체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Source: 한국무역협회

Note: HS코드 8542.31(시스템 반도체), 8542.32(메모리 반도체)을 기준으로 조화한 결과값임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자동차·이차전지 》 관세 인상·IRA 세액공제 혜택 축소로 부정적 영향

미국향 완성차 수출에 관세 인상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이 높아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뿐 아니라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도 축소될 경우, 한국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



보편관세·제조업 온쇼어링 친화 정책 기반,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무력화·축소로 국내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에 부정적 영향

- 미국 주도 자동차·이차전지 시장 재편을 위해 관세 인상·온쇼어링 친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IRA 일부 내용을 무력화할 방침
 - 보편적 무역관세·완성차 및 부품 생산 온쇼어링·전기차 세액공제 축소(폐지)·내연기관차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폐지 등이 주요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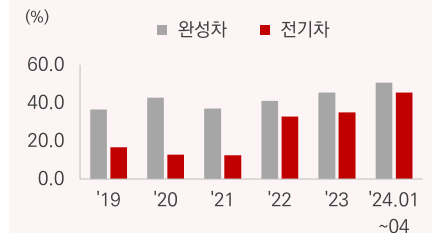
[자동차·이차전지 산업 관련 트럼프 당선인 공약]

구분		공약
자동차	관세	• 미국향 완성차 수출 시 보편적 무역관세(미국 내 수입 제품에 +10%p 이상) 적용 • 트럼프 정권인수팀장에 따르면 보편관세 공약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 카드로 밝힘('24.09)
	공급망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 시 온쇼어링을 통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기차	•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전기차 보조금(차량당 최대 \$7,500 공제) 축소 또는 일부 내용 무력화 • 전기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폐지
이차전지		• IRA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한 배터리 셀 및 모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또는 일부 내용 무력화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산업연구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한국 자동차 산업: 완성차 미국 수출 비중 최근 5년간 상승세... 보편관세적용 시 수출 물량 타격 예상
 - 2023년 완성차의 미국 수출 비중은 45.4%, 전기차는 35.0%로 높은 수준
 - 보편적 무역관세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우려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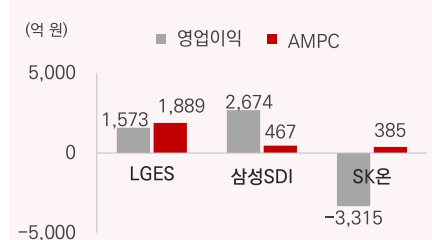
[한국 완성차·전기차 미국 수출 비중]



Source: 산업연구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한국 이차전지 산업: AMPC* 반영으로 영업이익의 제고에 수혜... 향후 세액공제 혜택 감소 시 각 사 수익성에 부정적
 - AMPC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LG에너지솔루션(LGES)은 316억 원 영업손실, 삼성SDI는 영업이익 폭 감소, SK온은 영업손실 폭 확대

[한국 배터리 3사 '24년 1분기 영업이익]



Source: 각 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산업연구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말함

에너지 》 반대 방향으로 가는 화석연료·기후변화 정책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는 반대 방향의 정책을 펼칠 것. 기존에 규제를 강화했던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ESG 관련 부담은 완화되지만 에너지 전환 속도는 늦춰질 것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 폐지로 화석연료·원자력 기업에 긍정적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업에는 타격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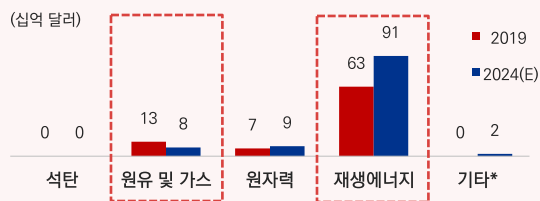
■ 미국의 에너지 생산 증대

- 석유, 가스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 화석연료와 원자력 등 미국 내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 도모
- 석유 및 가스 시추 등 에너지 생산 규제 철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신뢰가능한 저비용 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독립국, 초강대국으로 도약

■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기조 완화

-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규칙의 완화 및 폐지
- 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을 포함한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 종식

[미국의 에너지 발전 부문별 투자규모 비교]



바이든 정부를 지나면서 미국 원유 및 가스 발전 부문의 '24년 연간 신규투자액은 2019년 대비 36% 감소.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 투자는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Source: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4" (June 2024)
Note: 기타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를 결합한 복합발전 등을 의미

■ 美 화석연료로의 회귀가 한국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증가로 원유와 가스 가격은 하향 안정세 전망
- 신규 원유 및 LNG 생산 프로젝트 승인에 따른 파이프라인, 수출 터미널 건설 활성화로 한국 에너지 EPC(설계·조달·시공) 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태양광, 풍력, 수소 등 한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발전 프로젝트 감소 및 대미 수출 위축

- 친환경 보조금 축소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 미국 내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타격 발생
- 발전 기업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제조 및 솔루션 기업 등도 대미 수출 감소

■ 기후변화 대응 기조 완화로 한국 기업의 ESG 관련 부담 축소

- 미국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 완화 및 탄소배출권 구매 부담 완화, 상장사 대상 기후공시 의무 부담 감소 등
- 대미 수출 기업의 RE100* 가입 부담 완화 등 공급망 탈탄소화에 따라 발생하던 생산비용 증가 억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Renewable Electricity 100%(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조선 》 화석 연료 중심으로 회귀, LNG·LPG 운반선 수요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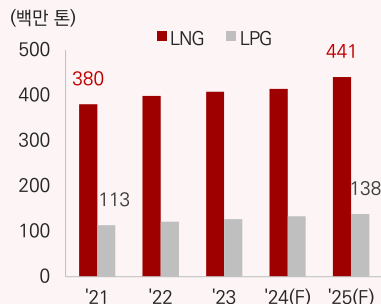
향후 화석 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NG·LPG 수요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 여겨지는 브릿지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지닌 한국 조선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



LNG·LPG와 같은 비용 효율적 에너지 사용 강조함에 따라 한국 조선산업의 LNG·LPG 운반선 수주 증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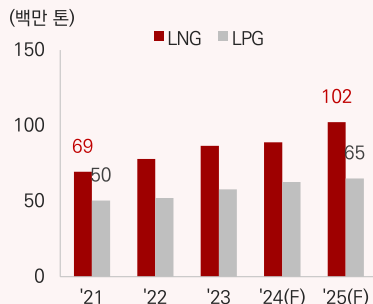
-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비용 효율적 사용 강조, 미국을 중심으로 LNG·LPG의 수요 및 수출 증가 기대
 -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녹색 전환 정책을 폐기하고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미국의 LNG(액화천연가스)·LPG(액화석유가스) 수요 및 수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불어 LNG·LPG 운반선 발주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

[LNG·LPG 해상 물동량 수요 현황 및 전망]



Source: Clarksons Research(2024.09)

[미국의 LNG·LPG 수출량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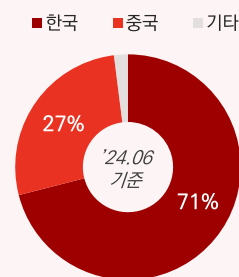
Source: Clarksons Research(2024.09)

- 브릿지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지닌 한국 조선산업에 긍정적 영향 기대

- LNG·LPG 등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 여겨지는 '브릿지 에너지(Bridge energy)' 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지닌 한국 조선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
- 실제로 '24년 1분기, 한국 조선사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29척, 암모니아 운반선 20척 등의 친환경 선박을 100% 수주한 바 있음

[국가별 LNG 운반선 수주 잔량 비중 및 인도 일정]

(상단: 척, 하단: 적재용량/천m³)



국가	'24	'25	'26	'27	'28
한국	45 7,835	70 12,360	68 11,957	52 9,100	17 2,958
중국	8 900	16 2,529	25 4,061	21 3,525	11 2,305
러시아	3 518	4 690	-	-	-
이탈리아	-	1 8	-	-	-
총계	56 9,253	91 15,586	93 16,017	73 12,625	28 5,263

Source: Clarksons Research(2024.06)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건설 》 대외정책에 따라 국내 건설사는 우려와 기대가 상존

트럼프 당선인이 신속한 러-우 전쟁 종식을 언급했던 데 따라 재집권 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계획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건설사의 수혜가 기대. 반면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중동 강경책으로 현지 긴장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중동시장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 건설업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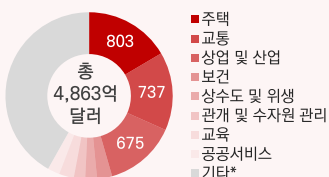


신속한 러-우 전쟁 종식 언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수혜가 기대되는 반면, 중동 강경책은 악재로 작용할 우려

- 트럼프, 러-우 전쟁 종전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
 - '24.06.25,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진영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해야만 무기 지원을 하는 종전안을 마련했다 밝힘
 - '24.09.27,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러-우 전쟁을 신속하게 종식시킬 것'이라 언급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한국 건설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를 가능성 제기
 - 한국은 민간 협력을 통해 도로, 주택, 발전소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트럼프 재집권 시 재건 계획 본격화로 수혜 기대

- 지속적인 중동 강경책 예고... 한국 건설업계는 트럼프 리스크 확산 우려
 - 트럼프 정부는 중동 사태 확대에 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중동 강경책을 예고
 - 최근 한국 건설사의 중동시장 의존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재집권으로 중동 긴장도가 높아질 경우 중동 국가 신규 발주 감소, 프로젝트 지연 등이 현실화되며 직·간접적인 악재로 작용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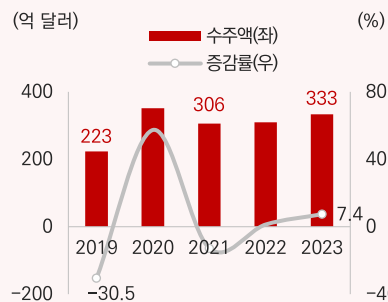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 ('24~'33)] [한국 건설사의 주요 우크라이나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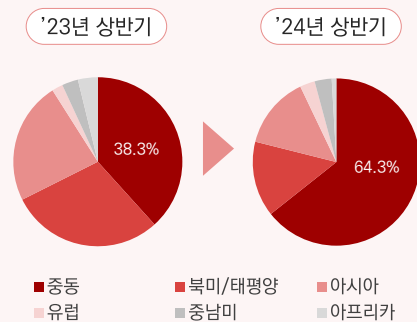
기업	시기	진출 분야
현대건설	'23.07	국토교통부와 보리스필 공항 확장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
	'23.11	우크라이나 전력공사로부터 1조 원 규모 송변전 사업 수주
제일엔지니어링	'23.09	우만 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사업 수주
삼부토건	'24.06	호로독 시와 스마트시티 4.0 프로젝트 관련 MOU 체결

Source: 언론보도 종합

[한국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현황]



[한국 건설사의 해외건설 지역별 수주현황]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농식품 》 친환경 규제 완화와 극단적 보호무역 영향권

트럼프 당선인이 친환경 규제 완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통 화석연료 생산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 전통 화석연료 생산 확대에 의한 바이오 연료 수요 감소는 곡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 한편 보편관세 부여 정책은 한국 식품 기업의 관세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환경정책 완화 기조로 인한 세계 곡물가 안정화 기대되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상존

- 트럼프는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전통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
 - 전통 화석연료 생산 촉진으로 인한 바이오 연료 수요 감소는 곡물가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트럼프는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미국 국내법에 근거하여 모든 수입품에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부여 계획을 발표

[트럼프의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도입 근거 법안]

구분	주요 내용
「1930년 관세법」 제 338조	• 대통령이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시, 포고를 통해 외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관세 신설 및 추가를 명령할 권한을 인정하는 법안
「1977년 국제비상경제수권법」	• 미국 안보, 외교, 경제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상황 발생 시, 대통령은 '국가비상'을 선포하고, 이를 근거로 수출입 등 일체의 대외 경제 활동 규제 가능

Source: KOTRA '트럼프 주장 보편관세 도입의 법률 근거 및 경제 파급효과 전망' (2024.01.19),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한국 식품 기업, 곡물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 영향 기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3개년(2021~2023년) 평균 곡물자급률이 19.5% 수준으로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
 - 수입산 곡물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식품 기업의 경우, 원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 효과 기대
- 보편관세는 한국과 같은 FTA 체결국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수출에 주력하는 식품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주요 가공식품 대미 수출액 추이]

(백만 달러)



라면·과자·김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국 식품의 미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3년 주요 가공식품의 미국 수출액은 전년대비 23.6% 확대

Sourc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2024.06.24), 한국무역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분석 대상은 HS코드 기준 곡물·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과 방류(19), 채소, 과실, 견과류,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20), 각종 조제식품(21)을 포함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방위 《자국 우선주의 공급망 회복 정책을 강조하며 동맹국 압박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보다는 자국 중심의 방위산업 공급망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 자국 우선주의와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정책 특성상 한미 방산협력 후퇴가 우려되는 등 일부 불확실성이 예상되나,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 추세에 따라 수출 호조 가능성도 존재



미국 방위산업 재건을 위한 자국 우선주의 강조로 일부 방산 수출 리스크가 예상되나 자주국방 추세에 따라 긍정적 요인도 존재

-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비롯하여 국방비를 절감하고자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책임 분담을 부각하고 자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내세울 방침
 - 러-우 전쟁 종식,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예산 증가 요구, 對중등 수출통제 완화 등이 주요 공약

[국방·외교 관련 주요 정책]

구분	정책
러-우 전쟁	• 러-우 전쟁 조기 종전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쟁 종식을 약속('24.09) -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혹은 중단
동맹국 협력	• NATO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안보 협력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 NATO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2% → 3%로 인상
수출 통제	• 방산 수출과 인권문제를 분리하여 수출 통제 완화 - 바이든 정부가 인권 침해국으로 지정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완화하여 자국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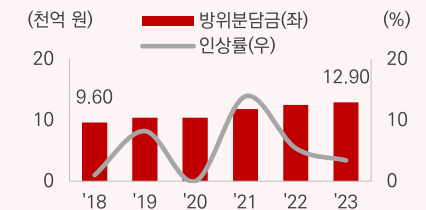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산업연구원, 외교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트럼프의 국방·외교 관련 정책에 따른 한국 영향
 - (방산 수출 리스크) 자국 우선주의는 미국 조달시장 접근성을 저하시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 촉발. 특히 러-우 전쟁 축소로 글로벌 방산 수요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에 따라 미국의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경쟁 심화로 한국 방산 수출에 타격 예상
 - (방산 수출 기회) 반면, 자국 우선주의는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이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국가들은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며, 이는 한국 기업의 방산 수출에 기회가 될 것

■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 방산협력 후퇴 가능성 시사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지속된다면 국방비 예산 고려 시 한국 방산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미국과의 무기체계 공동개발, 방산 공급망 진입까지도 어려움 발생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



Source: 산업연구원, 외교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산업연구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AI 》 미국 중심 AI 개발, AI 산업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전망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중심의 AI(인공지능)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AI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의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AI 산업을 자국 기업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한국 기업은 미국 AI 생태계 진입을 위한 미국 기업과의 제휴 확대 등의 전략을 모색해야 함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을 추진하고 AI를 전략 자원으로 고려, AI 활용 관련 규제 철폐 및 산업 지원 확대 전망

-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을 목표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전망됨
 - 대통령 재집권 시, 바이든 정부의 AI 산업 규제가 담긴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실리콘밸리 등의 기술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AI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AI 행정명령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지난 트럼프 정부 시기인 '19년 2월에는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한 바 있음
-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 J.D. 밴스 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전직 벤처캐피털리스트로서 AI 산업 지원을 규제보다 우선시할 것으로 전망됨
 - 밴스는 전직 벤처캐피털리스트로 기업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평가됨
 - AI 산업에서 스톡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오픈소스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AI 개발의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됨

[트럼프 1기 행정부의 AI 행정명령(American AI Initiative, '19.02.11 발표) 주요 내용]

주요 사항	내용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	• 미국의 AI 활용 역량 우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관련 기관이 모색하도록 했으며, AI 관련 교육 사업에 자국민 교육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함
정보 및 기술 공개 확대	•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자료 중 AI 연구계가 선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자료의 공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함
AI 예산 편성 관심도 강화	• AI 관련 R&D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은 AI 사업 예산을 예산 편성 시 우선시해야 함

Source: Federal Register,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한국 AI 기업에 미칠 영향
 - 미국 AI 산업을 자국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추진될 경우, 한국 기업에게 AI 서비스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미국 AI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한 미국 AI 생태계 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함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ents

I.	미국 대선 개요 및 결과	2
II.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외교·안보·경제·통상 정책	5
III.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	17
IV.	결론 및 시사점	27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조선, 건설 산업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자동차·이차전지, 에너지, 농식품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의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

산업	이슈 및 국내 영향
반도체	- 보호무역주의 및 대중 규제 강화, 반도체 지원법 관련 불확실성 확대 우려 - 한국 기업은 미국의 강력한 대중 견제책에 따른 일부 반사이익 기대
자동차·이차전지	- 미국향 완성차 수출 시 관세 인상 및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축소 - IRA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축소 또는 일부 내용 무력화
에너지	- 화석연료, 원전 등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와 유가의 하향 안정화 -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의 미국 내 발전 프로젝트 위축 및 수출 타격
조선	-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에너지 사용 강조 - 미국을 중심으로 LNG·LPG의 수요 및 수출 증가 기대
건설	- 신속한 러-우 전쟁 종식을 언급함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혜 기대 - 중동 강경책 예고는 중동시장 의존도가 확대되는 한국 건설업계에 악재
농식품	- 환경정책 완화 기조로 세계 곡물가 하락 기대 - 보편관세 도입으로 한국 식품 기업의 관세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방위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 방산협력 리스크 예상 - 미국의 중동 국가 수출 통제 완화로 중동 지역을 둘러싼 수출 경쟁 심화
AI	-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에 대한 철폐 및 지원 확대 전망 - 미국 중심 산업 성장 위해 미국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가능성 존재

트럼프 당선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유연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노력
-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력 제고로 대중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기회 확보
- 미국 내 제조 시설에 대한 빠른 안정화를 통해 북미 제조 물량 극대화
- 이차전지 시장 타깃 지역 다변화 전략으로 북미 외 유럽 적극 공략
- 신규 에너지 생산설비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참여 기회 모색
- 미국 외 수출국 다각화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 운반선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투자 강화
- 수요 감소, 공급 과잉 등 수급 불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 우크라이나의 도로·항만·주택 등 다양한 수주 기회 포착
- 중동시장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프로젝트 발주 상황 지속 모니터링
- 관세로 인한 한국산 식품의 가격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경쟁력 있는 가격전략을 수립할 필요
- 방산 수출 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 우려에 대비 민·관의 적극적 협력 필요
-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으로 방위비 증액에 예상되는 국가 공략에 주력
- 미국 중심 시장 형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 존재
- 미국 AI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한 미국 AI 생태계 진입 방안 모색 필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보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국 산업군을 명시하였음

Business Contacts

Industry Leader

금융산업

권영민 부대표

T 02-2112-0217

E ykwon@kr.kpmg.com

유통·소비재산업

신장훈 부대표

T 02-2112-0808

E jshin@kr.kpmg.com

전자·정보통신·반도체·엔터테인먼트산업

염승훈 부대표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제조·공공·인프라산업

황재남 부대표

T 02-2112-7609

E jaenamhwang@kr.kpmg.com

제조·에너지산업

노상호 부대표

T 02-2112-7626

E sanghoroh@kr.kpmg.com

home.kpmg/kr

home.kpmg/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limited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